2001 地方財政의 主要施策 方向

김 주 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장

Ⅰ. 머리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지 6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방행정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서비스, 행태개선 등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지방재정도 그동안 규모면에서 크게 신장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지역특화사업추진,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등 다양성과 독창성이 반영되어 지방의 성장잠재력이 살아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는 비효율성과 취약성, 선심성 예산집행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하여 일부 언론이나 국회,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그동안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전반적으로 분석·조명해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지방재정의 현 주소를 좀 더 진솔하게 진단, 조명해보고 금년도에 우리 지방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추진시책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Ⅱ 地方財政의 周邊與件

1. 경제적 여건 및 전망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단시간 내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경제는 '98년의 『마이너스』성장에서 벗어나 지난 2년간 물가 안정 속에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되었다.

< '99, 2000년 주요경제지표 >

	('99)	(2000)
· GDP 성장률	10.7%	9.0%
· 소비자 물자	0.8%	2.3%
· 외환보유고	741억불	962억불

그러나 지난해 4/4분기 이후 (주)대우 부도에 따른 금융불안 및 고유가 등 대내외적 여건 악화에다 심리적 요인까지 가세하여 경기는 성장세의 둔화 국면을 맞고 있다.

다행히 앞으로 구조조정과 경제안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경제는 5～6%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적정 성장경로로 진입하게 되며,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대에서 안정되고 경상수지는 50～70억불의 흑자기조가 무난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2. 세입・세출 전망

지방재정은 국가경제가 예정대로 운용된다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정상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당초예산 편성결과 지방예산의 순계규모는 총 64조 4,892억원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대비 16.2%가 증가하였으며 종전에 국세였던 지방교육세(2조 9,767억원)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는 10.8%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는 '99년대비 2000년 당초 예산증가율 10.9%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전체 예산중 경상예산은 15조 190억원(23%)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 13조 9,401억(25%)보다 예산액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예산액대비 구성비는 오히려 감소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상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Ⅲ. 地方財政運營 實態와 構造的 特性

1. 지방재정운영 성과

가. 지방재정규모의 증가

지방재정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중의 하나가 재정규모의 증가이다.

이는 지난 '99년도에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정율인상(13.27%→15% 연간 1조원 증가), 지방양여금법 개정을 통한 지방양여금 재원확충(9,210억원), 지방세법개정을 통한 주행세신설(3,022억원)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발굴, 부존자원의 개발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세입증대 노력이 기울여 지기도 하였다.

나.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발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맞물리면서 지방재정운영시스템은 아직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이제 서서히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민선자치 이후 예산편성시스템이 종전의 통제위주의 편성지침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확대되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예산편성 → 결산환류라는 일련의 재정관리 시스템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 지방예산의 건전성 확보측면에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주민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노력 등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착되고 있다.

한편, 보통교부세의 산정항목도 교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산식화하여 법령에 명시토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조정제도 역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다. 지방세 제도개선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99～2000년도에는 지방세제를 대폭 손질하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세제개혁의 실현과 함께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기반을 동시에 구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먼저 자동차세 차등과세 등을 통하여 보유과세를 완화하고 이용과세를 강화

하는 한편 주행세율 인상으로 재정을 보전함으로써 재원확충과 함께 이용자의 형평성을 제고했으며,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에 부가(附加)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과 아울러 일부 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였으며 기타 불요불급한 지방세 감면대상 축소, 면허세과세대상의 합리적정비, 인테넷 고지 등 지방세납부제도 개선을 통하여 조세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주민들의 편익성 확대와 조세형평을 실현하였다.

라.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구축

'99년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지방공기업 설립인·허가권 등을 대폭 지자체에 이양하여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한 반면, 지방공기업의 운영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토록 하여 부실공기업은 과감하게 정리·축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갔다.

실제로 작년말까지 11개 지방공기업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와 함께 3,856명의 인력감축을 통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연봉제, 성과급제, 조기퇴직제, 퇴직금지급율 개선 등 공기업의 내부경영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단계에 있다.

2. 지방재정의 취약성

가. 구조적인 취약성

지방재정의 규모면에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재정은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중앙 의존도가 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1년 중앙재정 對 지방재정의 비율은 68 : 32 (일본 48 : 52)이며, 중앙의존재원 비율이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의 조세총액중 비율은 20%(국세:지방세 80:20)로 매우 낮고 매년 국세에 비하여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전국평균 57.6%로써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29개단체(11%), 지방세 수입으로 미해결단체가 146개단체(58%)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시·도의 경우 최고는 서울 94.9%, 최저 광주광역시 59.5%, 시·

군·자치구의 경우 최고 경기도 과천시 96.3%, 최저 전남 장흥군 9.3%로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상예산비율이 높은 반면에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경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19.8%로 지방재정 구조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이후 중등교원인건비 지원확대 등에 따른 교육재정지원비부담(연간 2,500억원정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연장(연간 716억원),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금(연간 716억원), 도시계획장기 미집행시설 사업비 부담(연간 총 6조 2,500억) 등 각 부처별로 지방비부담요구가 계속되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다. 지방채무의 증가 등

2000년말 현재 지방채규모는 총 18조 7,955억원으로 '95 민선자치이후 매년 10%이상 증가되어 왔으나, '98이후 채무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2000년의 경우 연평균 12%의 채무증가율이 4.3%로 크게 떨어졌고 전체예산액대비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22%로써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155%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며, 연간 채무상환비율도 3%에 불과하며 내용면에서 보더라도 대부분 국내채(95%), 5년이상 중장기채(93%), 저리채(80%)로서 지하철건설(11%), 상·하수도(26%), 도로확충(20%), 월드컵경기장건설(4%) 등 SOC 사업을 위하여 투자된 것으로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특별회계채무가 57%나 되어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하철건설, 월드컵·아시안게임 경기장건설 등 주요시책사업 추진으로 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욕구팽창, 자치단체內의 소지역간의 재원배분형평성 등을 이유로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예산편성, 선심성·낭비성 경비를 과다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Ⅳ. 2001 地方財政의 主要施策方向

1.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제고

그동안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분석·진단,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제도화 등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체계화하고 제도운영의 내실을 도모하여 건전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제도적 토대 위에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운영성과를 지방교부세와 연계시키고, 지방채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킬 계획이다.

가.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및 『페널티』~부여

교부세의 재원보전과 형평화기능을 조화시켜 나가면서 기준재정수요 및 수입액산정시 자구노력정도를 반영하는 인센티브 적용대상항목을 지난해 8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거나 투·융자심사, 지방채발행승인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는 등 정당성을 결여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는 재정질서 확립차원에서 지방교부세의 일정액을 삭감하는 『재정페널티』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지방재정운영상황 측정 및 분석·진단제도 운영개선

매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기초로 248개 전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운영구조를 재정자립도, 경상수지비율, 투자비비율, 재정력지수 등 재정운용구조를 10개 지표에 의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재정진단결과에 따라 조직개편, 세입증대 노력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분석결과와 진단시점의 재정운영상황을 기준으로 재정진단 단체를 선정하고 10개 분석지표의 시계열분석과 성과지표 활용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 재정진단을 보다 내실있게 실시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정분석지표 중 노력성·생산성 영역의 4개지표에 대한 측정결과를 등급화하고 재정운영상황 측정은 선심성·행사성 예산집행, 소규모 분산투자 등에 대하여 총 5개분야

14개 지표를 적용하여 시계열별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정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시에 반영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

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운영 강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부분별한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92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투・융자심사제도는 그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나름대로 수행하여 왔으나 다양화된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효과적으로 검증하고 그 이행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투·융자심사결과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각종 지원재원과 체계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투자심사 결과의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B/C 기법 등을 활용한『평가메뉴얼』을 개발하고 사전평가제 및 현장평가제 도입과 함께 심사위원을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대폭 보강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투·융자심사결과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투·융자심사결과의 예산편성율, 사업추진상황 등을 평가하는『사후평가제』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라. 지방채무의 적정관리 대책강구

앞서 언급했듯이 2000년말 현재 지방채무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98이후 채무증가율도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채무관리 방안 및 승인기준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년중『자치단체 채무관리 및 지방채발행 심사규칙』을 제정하여 감채기금적립 및 순세계잉여금의 활용비율을 법정화하고 적체사업 및 적체단체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적정한 지방채 발행, 운영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채무과다단체에 대한 채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승인시 채무과다 단체의 향후 5년간 감축목표설정 등『지방채무관리계획』을 수립・운용토록 하고『채무운용전망보고서』제출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2. 투명성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선

그동안에도 지방재정운영의 주민공개제도 시행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대하여 왔으나 『인터넷 혁명』 등으로 행정의 전반적인 추세가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대라는 사회적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전자정부 조기실현을 위한 노력과 초고속행정정보망 구축과 발맞추어 지방예산통합정보시스템(LBIS, Local Budget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에 대한 기본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 시스템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급하여 지방예산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검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등 공공부문의 순수재정활동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통합재정수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부터 2002년까지 과목구조 정비 및 시범적용기간을 거쳐 2003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정부출범이후 예산회계의 신뢰성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제도는 금년중 회계기준 마련 등 체제정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범적용과 법령정비 등을 완료한 후 2005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지자체기금운용현황을 정밀분석하고 통·폐합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 등 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지방재정확충 및 격차완화

지자체 실시이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취약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자주재원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단체별 재정력 격차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가.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방재정 수요를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수준으로 산정 하는 것은 균형있는 재원배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각종현황을 세밀하게 검토·분석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재정 수요에 대하여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하고 수요감소항목은 통·폐합하는 등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건전성·생산성 향상정도에 따라 차등교부하는 『재정인센티브』와 방만하고 불건전하게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액을 삭감하는 『재정페널티』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는 수단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지방양여금은 국가와 지방간의 구조적인 재정불균형 체제하에서 근본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중앙·지방간의 재원이용방식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지방에 이전된 재원이다.

2001년도 양여금재원은 주세, 전화세, 교통세, 일부 농특세 전입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도 2004년까지만 존치하는 한시재원이며 교통세도 2003년까지만 존치되는 재원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통세폐지에 따라 양여재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안정성과 신장율이 있는 세율을 일정율로 양여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로사업에 배분된 주세의 6.6%를 축소, 수질개선에 확대하여 도로와 수질부문간의 배분비율을 조정하고, 그동안의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재원부담을 점차적으로 완화·조정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面이 있으므로 양여금 세수증가와 연계하여 계속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 지방세수 확충방안 강구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하여 현행 지역개발세 과세대상(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이외에 원자력 발전 및 기타 지역별 특수부존자원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에 부과하는 면허세 폐지에 따른 지방세 수감소액 보전을 위하여 주행세율 조정을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다.

또한 국세(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방식의 『지방소비세』도입을 통하여 자치단체간 세원의 불균형

을 완화하고 소비탄력성 제고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라.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등 세외수입 확대

금년에도 원가미달 수수료,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총 394개 조례, 8,117종의 요율을 조정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357개 조례 5,269종의 요율을 조정할 계획이며 건교부 등 7개 부처소관 105종의 국가위임 무료제공서비스도 유료화 할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별로 도로, 하천의 점유・사용 등의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장・방치된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입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수입증지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수료의 현실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균형된 요금체제를 개선하고 요율 장기미조정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지방재정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복권의 경우 당초계획은 수익금이 1천억원 정도 발생되면 시・도별 판매실적 등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었으나 '95년 민선자치이후 현재까지 즉석식복권만 판매하여 수익금 적립금이 총 306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복권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라인복권 연합발행추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마. 지역균형개발시책 지속 추진

그동안 정부의 개발정책방향은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오지·도서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으로 지역개발불균형 및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동안에도 지역균형개발촉진차원에서 오지・낙도 등 낙후・소외지역에 대한 주민생활환경개선이나 자생능력기반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접경지역지원법』,『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정을 계기로 민통선에 접한 소외지역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소도읍지역을 중점 투자해서 농・어촌지역의 중심도시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달동네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우선 금년도에 총 4천억을 투입,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 주민 편익시설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 강화해 나가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노력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4.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강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경제는 투자·소비의 위축 등으로 둔화 국면에 처해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의 경우는 지역건설업, 유통업의 침체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재정의 가용재원을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에 집중투자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여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기업창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구·인천·광주 등 전국 10개지역에 벤처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집중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울산·충남·경남 등 전국 8개지역에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하고 4개지역에 소프트웨어지원센타 및 정보교환센타 설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3개도시에 전자상거래·기술지원센타 건립을 위해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기업의 지방이양 촉진을 위하여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5년) 등 지방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유지 장기임대(5→20년), 임대료인하(5→1%) 등 행정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96 시장개방이후 대형점들의 지방입점 증가로 종래 지방상권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재래시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경쟁력 있고 특화가 가능한 재래시장을 선정, 시설현대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투자하고 월드컵 관광객을 위한 대표적인 볼거리 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전도시고속화도로 외자유치, 경남 노무라연구소 연구용역 등 외국인 투자유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여 외자유치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5.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추진

2000년말 현재 지방공기업은 총 304개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직영기업 173개, 지방공사·공단이 96개, 지방자치단체가 50%미만 출자한 단체가 35개가 있으며, 이러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는 지방재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해 132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 등 21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나름대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이 이루어졌다.

금년도에는 그동안 추진하여온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우선 지방직영기업에서 진행중인 상・하수도 기구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명실상부한 기구의 통합이 되게 하기 위하여 회계의 통합운영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공기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민영화,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면서 신규로 설립되는 공기업에 대한 설립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설립된 지 1년 이상 된 모든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부실공기업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여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 대상사업축소, 인원감축 및 개선, 폐쇄조치를 취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하수도요금 체계개선, 상・하수도업무중 일부의 민간위탁 추진, 사업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Ⅳ. 맺음말

금년은 국제적행사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로서 상반기에는 고용 및 자금시장 불안, 소비・투자심리위축 등으로 경기가 다소 둔화국면에 있으나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추진 될 경우 하반기부터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어서 지방재정의 외부적 환경이 그리 나쁜 편만은 아니다.

우선 내국세 규모증가와 법정율인상 효과로 지방교부세가 다소 증가되고 지방세수도 예년대비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만한 지방재정운영은 결국 주민들의 부담이 되고 지방재정의 체질을 약화시키면서 국가경제마저 멍들게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재원을 확충하고 한정된 재원을 짜임새있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와 운영개선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가 모두 중지를 모아 지방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사용어 해설

• 베이비 모굴(Baby Mogul)

미국 언론이 할리우드 전성기 때 메이저 스튜디오를 통해 화려하게 데뷔한 인기 배우를 지칭하는 데서 유래했다. 유력가를 뜻하는 속어 모굴과 신예를 뜻하는 베이비가 합성된 말이다. 한마디로 21세기 디지털 세계를 지배하게 될 젊은 벤처사업가를 가리킨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야휴의 제리 양, 어스링크의 스카이 데이튼, CNet의 할시 마이너 등이 대표적인 베이비 모굴이다. 유리시스템즈를 창업하고 루슨트 테크놀로지 네트워크 부문 사장으로 있는 김종훈 씨와 아이네트의 허진호 사장, 컴퓨터 백신 분야의 안철수 씨 등을 한국의 베이비 모굴이라고 할 수 있다.

- 편 집 실 -